



우크라이나
전쟁

1~10면

여수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심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11면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요구한다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라

12면

IPCC 최신 보고서
사회주의냐 멸종이냐
하는 선택 앞에 있다

15면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16면

러시아 철군!



나도 확장 반대!

러시아 제재의 피해는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소피 스카이어

대(對)러시아 고강도 제재의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것이고, 전쟁 광기를 부추길 것이다. 미국과 그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외환보유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의 몇몇 금융 기관을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했다. 스위프트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 지불 방식이다.

2월 28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만 참가해 열린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이런 행보가 의도한 [제재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유럽연합 등이 동참할 것이다. 이 제재는 기술적·외교적·정치적 채널, 심지어 최고위급 채널도 총동원해 몇 달 동안 계획하고 각국의 동참을 도모한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나라도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루블화가 폭락하고 있다. 이제 곧 물가가 급등하고 [러시아] 경제가 크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다.



애플, 구글페이 중단으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혼란에 빠진 평범한 러시아인들

서방은 그러면 [러시아에서] 반(反)푸틴 운동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같은 일 때문에 푸틴에게 지지가 모일 수 있고, 지금 용기 있게 반전(反戰)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악독한 나토의 꼭두각시로 푸틴이 매도하기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비판은 제재가 부족하다는 것 일색이다. 러시아 대중에 대한 더 “효과적인” — 서방의 제국주의 전쟁에는 절대 부과되지 않을 — 제재는 필요 없다.

충돌이 계속되면 석유·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지난주에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승인을 중단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13퍼센트나 급등하는 기점이 됐다. 이 때문에

후과가 있을 듯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렇게 썼다. “러시아가 대(對)유럽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소비자들과 산업이 심각하게 고통받을 것이다. … 서방 세계 전체가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목전에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역에서 빚어질 차질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부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뜰이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밀 가격은 80퍼센트나 올랐다. 옥수수 가격도 그만큼 올랐고, 콩·커피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충돌 때문에 식품 가격 인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이렇게 말했다. “밀 가격과 빵 가격 인상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산·러시아산 밀을 더하면 세계 밀 생산량의 약 4분의 1 정도다. 세계 밀의 12퍼센트, 옥수수 생산량의 13퍼센트가 우크라이나산이다. 러시아 곡물수출조합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중단·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흑해를 거쳐 러시아산 곡물을 대량 수입하는 곳들, 일차적으로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튀니지 정부는 이미 밀 수입 판로를 새로 찾기 시작했다. 밀 소비량의 50퍼센트를 러시아산에, 30퍼센트를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는 이집트의 경우, 수입이 지연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4호 / 번역 김준호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이 3월 6일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열렸다.

집회 소식 보기:
wspaper.org/
m/27462



부패와 결별 못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칭송하는 분위기가 크다. 대통령 문재인은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추켜세웠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전 세계가 감동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소피 스카이어는 젤렌스키가 미화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자임을 조명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국민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다. 젤렌스키는 자신이 러시아의 “넘버원 타겟”이라고 내세운다.

일부 언론들은 젤렌스키가 영화 〈패

딩틴〉의 우크라이나어 더빙을 맡았던 것을 비롯해 그의 코미디언·배우 이력을 우호적으로 조명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는 것은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젤렌스키의 이력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2015년에 젤렌스키는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교사 역할로 TV 시트콤에 출연했다. 2019년에 대권을 잡은 젤렌스키의 정당 ‘국민의 종복’은 그 시트콤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젤렌스키는 부패를 끝장내고 정부를 “청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두 달 만에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

럼프가 같이 연루된 부패 혐의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그 스캔들로 트럼프 탄핵 재판이 열렸다.

젤렌스키가 취임 후 처음에 한 일 중 하나는 안드리 보호단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다. 보호단은 우크라이나 올리 가르히[소련 붕괴 후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챙긴 집단들의 변호사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부패 관련 법에 따르면 2024년까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젤렌스키는 이전 대통령들의 비밀 해외 순방을 비판했지만, 자신도 2020년 1월 오만 방문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21년 10월 ‘판도라 페이퍼스’[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금융 기밀 문서들]가 폭로됐을 때도 젤렌스키는 스캔들에 휩싸였다. “반부패” 공약을 내세웠건만, 정작 그 자신과 측근들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키프로스, 벨리즈에 역외 회사를 몇몇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패 의혹들이 제기되고 팬데믹 대응 실패가 분노를 사자, 젤렌스키는 더 강경한 반(反)러시아·반(反)푸틴 태도를 취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4호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UNHCR

비행금지구역 설정 — 미·러 직접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과 서방은 “비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다.

언론들은 이것이 능동적 군사 개입이 아니라 폭력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상대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겠다는 결정으로, 직접 교전을 상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 캐나다 · 미국이 3월 초에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 비행기에 대한 비행금지를 설정한 것은 러시아 비행기 운항을 동 · 서에서 봉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나토군(과 그 주축인 미군)이 직접 참전해 러시아군과 싸우라는 말과 같다.(관련 기사 6~7면)

아비규환의 전주곡

이전에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대규모 군사 충돌의 전조였다.

1993년에 나토는 발칸 반도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세르비아를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몇 년 후인 1999년에 나토 공군은 78일 동안 9300번이나 출격해 세르비아를 폭격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징벌한다며 1991년부터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



사진 출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비행 중인 나토 전투기 지난 사반세기 동안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사 개입의 발판이었다

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폭격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 점령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2011년 3월 유엔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다음 날부터 리비아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행해, 6개월 만에 8500회 넘게 리비아 곳곳을 폭격했다.

당시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카다피가 민중 항쟁을 제압하려 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서방은 이를 아랍 혁명에 개입할 기회로 삼았다.

당시 친서방 정부들뿐 아니라 한국의 <한겨레> · <경향신문>, 진보 정당인 진보신당 · 사회당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옹호했다.

하지만 서방 개입의 가장 큰 피해는 독재자에 맞서 투쟁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입었다.

리비아에 이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시리아에서도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폭격을 했고, 오늘날 시리아는 전 세계에서 전쟁 난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됐다.

군사 개입

지난 사반세기 동안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군사 개입의 발판으로 삼은 미국이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이번 비행금지 조치는 세르비아 · 이라크 · 리비아와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러시아군이 대상이다.

그래서 바이든은 나토가 직접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러시아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것을 미국이 한사코 피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현재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우크

라이나 정부를 음양으로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

이번 전쟁 발발 전부터 서방 강대국들은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은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전투기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킬 무기를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폭로도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군사 개입을 추적해 온 잡지 <미들 이스트 아이>는,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군과 계약을 맺고 군사 작전을 대리 수행해 온 민간군사기업(PMC)들이 ‘의용군’(용병)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작전 중이라는 정황 증거들을 폭로했다. 다른 외신은 유럽 각국의 극우 · 파시스트 준군사 조직들이 이 ‘의용군’에 속해 참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서방의 군사 지원에 발맞춰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려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응전을 도발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일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더 심각한 전쟁(어쩌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직접적 군사 충돌)을 초래할 위험한 조치라고 규탄해야 한다.

김준호

반전 시위에 참가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체포되다!

찰리 김버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회주의자 로잘리아 자말로바와 다리야 샤르코바를 구금했다. 이들은 3월 6일 니즈니노브고로드시(市)에서 열린 반전(反戰) 시위에 참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러시아 정부가 반전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운동이 만만찮은 사회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오베데-인포에 따르면, 3월 6일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등 러시아 49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오베데-인포에 따르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의 100여 개 도시에서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했고, 최소 1만 2000명이 구금됐다. 3월 6일에도 대량 체포를 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약 3500명이 구금됐다(러시아 내 무부 발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모스크바에서는 약 1700명이 체포됐고, 상

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750명이 체포됐다. 극동 지방의 도시 하바로프스크의 한 광장에서는 한 시위 참가자가 “전쟁에 반대한다! 부끄럽지도 않나?” 하고 외치다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전날인 3월 5일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군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연행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긴급히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잘리아 자말로바와 다리야 샤르코바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할 뿐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적 책략에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의 일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5호 / 번역 김준호

로잘리아 자말로바는 체포 전인 3월 1일(한국 시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주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 —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서 연설했다. 토론회 전문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spaper.org/
m/27444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반대 메시지

다음은 러시아의 반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이 3월 6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반대! 국제 행동의 날’ 집회에 보낸 연대 메시지다. **정보라 노어노 문학 박사**가 메시지를 번역했고, 집회에서 사회자가 번역한 것을 낭독했다.

우리들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경향은 남한에서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하는 동지들에게 반갑게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적 투쟁의 자매이고 형제이며 동지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 반대를 외치고 우리(러시아) 정부의 거짓말을 규탄하여 거리로 나온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포도 위협도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권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우리와 함께 싸우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민족들에게 자유를, 제국에 죽음을! 민족간 전쟁은 없고 계급 간 평화도 없습니다!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에 참가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

사진 출처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내적 모순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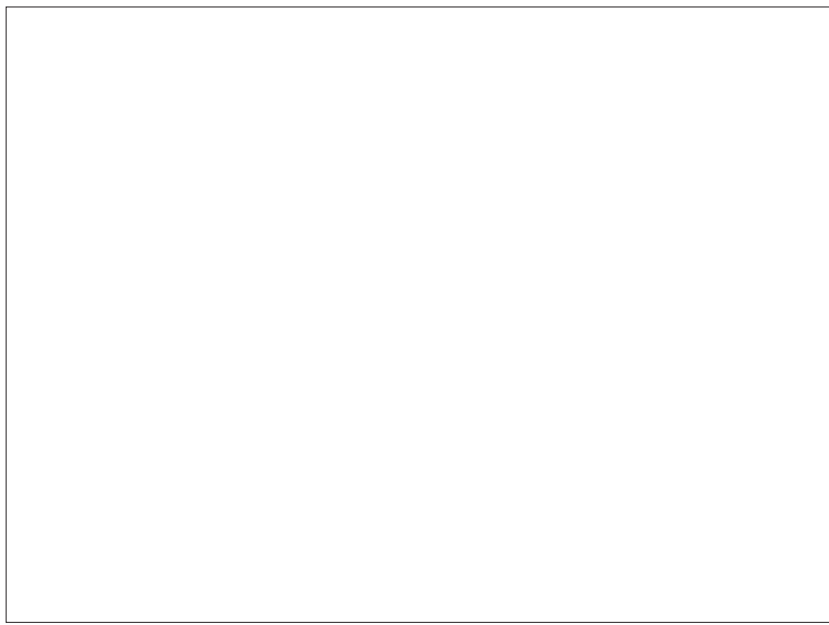
“역사의 종언은 매우 슬픈 시기가 될 것이다. 인정 투쟁, 순전히 추상적인 목표에 목숨까지 바치려 드는 헌신성, 대담함·용기·상상력·이상주의를 자아내는 세계적 이데올로기 투쟁은 사라지고 경제적 타산, 끝없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환경에 대한 우려, 세련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이를 대신할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유명한 책 《역사의 종말》에서 이렇게 썼다. 이 책은 1989년에 출판됐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직전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스탈린주의 지배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후쿠야마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 말 그대로 역사의 종말이다. 즉,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인류를 지배하는 최종 형태로 보편화된 것이다.”

글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딱히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는 않다. 최근의 세계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푸틴의 핵전쟁 위협 이후 세계는 지나치게 흥미로워지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런 만큼 후쿠야마는 해명해야 할 게 많다. 그런 그가 최근에 내놓은 해명이 바로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긴 글이다. 푸틴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어째서 이토록 수세적인 처지에 놓였을까? 1989년 이후 20년 동안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는데도 말이다.

후쿠야마의 해명에는 변변찮은 데가 있다. 그는 이런 불평을 한다.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우파와 좌파가 공히 과학과 전문성을 불신한다.” 좌파가 그러는 사례로 후쿠야마는 주로 비판적 역사가 미셸 푸코를 든다. 그러나 푸코에 관한 후쿠야마의 서술은 그가 푸코의 저작을 한 줄도 읽어 보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는 이렇게 썼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살아 봤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 중부·동부 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위)와 이라크 전쟁(아래)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는 내적 모순이 심화하면서 세계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나 현재 유럽에서 가장 우익적인 정부가 들어선 나라는 [중부 유럽의—역자] 헝가리와 폴란드다.

그러나 후쿠야마의 글을 판통하는 더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이다. 이 주제는 2016년 11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더 뚜렷하게 제시된다. 그 글에서 후쿠야마는 당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캘리니코스]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무자비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 대응하려고 기업들은 공정을 아웃소싱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으며, 그러면서 선진국의 노동계급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장기적인 과정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몇 년 후에 일어난 유로존 위기로 더 악화됐다.

“두 경우 모두에서 특권층이 짜 놓은 시스템은 ... 외부 충격에 의해 극적으로 붕괴했다. 그 실패의 비용은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더 무겁게 부과됐다. 그 후 진정한 문제는 왜 2016년에 포퓰리즘이 부상했느냐가 아니라, 왜 2016년이 돼서야 부상했느냐이다.”

이번 글에서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 지속 불가능한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였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자기 무덤을 판 다른 중요한 방식을 언급하지 않는다. 바로 미국의 조지 W 부시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재앙적인 전쟁이다. 어쩌면 그것은 정치경제학자 월 데이비스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한 네오콘 집단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후쿠야마가 지지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또, 후쿠야마는 갈수록 양극화되는 세계 정치의 중요한 역설 하나를 직시하지 않는다. 후쿠야마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즐겨 비난하는 두 권위주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서방 주도의 세계시장에 참여하면서 힘을 키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유럽에 각각 제조업 제품과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성장했다. 또한 현재 모두가 린치라도 가할 듯이 비난하고 있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런던의 부촌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국제 자본주의의 일부이지 낯선 외부인이 아니다.

처음에 후쿠야마는 독일의 대철학자 헤겔의 추종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에 내재된 모순이라는 헤겔의 핵심 사상을 후쿠야마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내적 모순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야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투쟁이 아니라 말이다.

번역 이원웅

나토는 러시아 침공의 해결책이 아니다

찰리 김버

푸틴의 침공에 맞서는 최선의 길은 나토 열강에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의 운동이 러시아 대중과 함께 전쟁에 반대해 저항에 나서는 것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나토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을 쏟아붓고 있다.

나토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장기작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략에서 느끼는 지극히 정당한 공포와 혐오를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

올해 초 3400명 규모였던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의 나토 병력은 근시일 내에 2배 가까이 늘어나 6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영국군 병력 약 1000명이 이미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 영국은 또한 연안경비함 '트렌트'와 구축함 '다이아몬드'를 보내, 지중해 동부에서 헬리콥터 '멀린',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등을 함께 동원한 나토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미국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50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 프랑스군은 이번주에 루마니아로 이동 중이고, 슬로바키아에 배치될 새로운 나토 전투단이 구성되고 있다. 이 전투단에는 1500명의 병력이 포함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폴란드 전투기



폴란드와 미국의 합동 훈련 나토의 동유럽 국가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 이 국가들을 지정학적 경쟁의 장기작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을 폴란드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게서 러시아제 전투기를 받고, 폴란드는 이후 미국에게서 F-16 전투기를 제공받게 된다.

나토가 이 정부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 정부들이 러시아에 맞선 전선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고, 또 서방의 요구에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토는 방어적인 군사 동맹이 아니다. 나토는 서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일환으로 나토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전 세계적 프로젝트에 종속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2월 23일 나토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수많은 대전차 무기와 대공 미사일, 소형 화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의료 물자를 포함한 거액의 재정적 ·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나토 30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 나토는 이렇게 밝혔다.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에스토니아 · 프랑스 · 독일 · 그리

스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네덜란드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영국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이미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거액의 재정 지원 외에도 재블린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 중요한 무기들을 받았다.”

나토의 무기 지원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서방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정부가 모두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체첸을 분쇄했을 때, 체

여러 해 동안 쏟아진 서방의 무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지원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이번 주에 발표된 영국 하원의 조사 보고서는 서방이 무기 지원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추겨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무기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나토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그밖의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계속 졸라서 결국 요구 사항을 받아냈다.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넘겨줄 수 없었

던 첨단 살상 무기들을 현재의 위기 덕분에 이제 내놓고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방 동맹국들은 지원을 크게 늘렸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이 핵심이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비살상적” 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 등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 무기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30일,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2000기를 제공

했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함대를 흑해 지역으로 보내 우크라이나 해군과 여러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최근에는 2021년 여름 ‘코사크 메이스’ 합동 훈련이 있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디펜더함이 흑해에 머무르며 “우크라이나와 역내 나토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드러내 보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 해군과 전투가 벌어질 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디펜더함이 영해를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

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미국은 영국보다 더 빨리 무기 지원으로 전환됐다.

“1990년대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의 주요 수혜국이 었다. 독립 후 첫 10년간, 우크라이나는 약 26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았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충돌이 시작된 2014년 이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 이상의 안보 원조를 제공했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종속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첸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서방 정부들이 러시아의 특별히 잔혹한 방식에 가끔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1994~1996년 첫 번째 체첸 전쟁 때는 러시아를 공개 지지했다. 서방 정부들은 체첸의 독립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최대 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결국 이 전쟁은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가 파괴되는 것으로 끝났다. 러시아군 장성이자 역사가인 드미트리 볼코고노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어린이 5000명을 포함해 약 3만 5000명이 죽었다.

서방에 친화적인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인 1999년~2000년 2차 체첸 전쟁에 와서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체첸 전쟁을 비난했다. 그때조차 체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 당시 서방에서 체첸을 지원했다가는 “테러리스트”로 몰려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총리 토니 블레어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

틴에게 지지를 표했다.

나토의 지원으로 대답해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나토군은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핵무장 열강 간의 제3차세계대전을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속히 추진해 달라고 나토에 요구했다. 그리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서방 국가들에게 군사 개입 약속을 요구하겠다고 고집했다. 이런 행보는 향후 훨씬 더 위험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무모한 행위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 침공이 패배해 푸틴의 제국주의에 타격이 되길 바란다. 푸틴의 침략군은,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대중과 사병들의 반란, 나토 열강에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운동이 결합돼서 패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관련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본지 407호)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포, 구속, 또는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서 모두 배워야 한다. 이들이 우리의 모범이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이 용감하게 거리 시위에 나섰다. 대중 시위는 러시아군 병사들을 동요하게 하고 점령에 맞선 조직의 기반을 다질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종속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설사 러시아군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얻은 승리는 우크라이나 민중이 아니라 서방 군대의 승리가 될 뿐이다. 전쟁 확대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나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토의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토와 더 광범한 서방 세계가 우고슬라비아에서 199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비아에서 벌인 무자비한 공격으로, 세계는 강대국 지배 계급이 자신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런 곳이었다. 푸틴도 그 길을 따르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나토의 구실을 규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가 의료·교육을 긴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전쟁을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을 쓴다는 사실도 폭로해야 한다.

보고서는 타당하게도 이렇게 인정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이라고 밝히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여 2014년~2015년 이곳에서 벌어진 충돌의 정치적 해법의 기반이 된 민스크 협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서방은 무기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서방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서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정부 에너지 장관의 거래

트럼프 정권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에 군사 지원을 하는 동시에 경제적 유대 관계도 맺었다.

2018년 미국 에너지 장관 릭 페리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수출로] “유럽판 텍사스”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듬해 페리의 가까운 정치적 후원자 2명이 좋은 수익이 예상되는 석유·가스 탐사 계약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서 따냈다. 이는 젤렌스키의 새 정부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젤렌스키의 취임식에 페리가 참석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페리의 후원자들에게 이 계약을 선물했다. 취임식 후 회담에서, 페리는 젤렌스키에게 에너지 고문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넸다. 명단에 적힌 4명 중 한 명은 페리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인 마이클 블레이저였다.

일주일 후 블레이저와 그의 파트너 알렉스 크랜버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바르빈스카 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시추 계약에 입찰했다.

그들의 입찰가는 다른 유일한 경쟁자보다 수백만 달러 낮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만든 새로운 합작 벤처 기업 ‘우크라이나 에너지’는 50년 시추 계약을 따냈다.

떼돈 버는 군수기업들

부자들에게 전쟁은 돈벌이 기회다.

독일이 올해 국방 예산을 1000억 유로[약 12조 원]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자 군수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군수 기업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시장 가치가 6퍼센트 뛰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휴대용 로켓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나토에 장갑차를 공급하는 독일 군수기업 라인메탈은 시장 가치가 30퍼센트 이상 뛰었다.

영국의 주요 무기 제조 기업 BAE시스템스는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BAE시스템스 투자자들은 수익이 26퍼센트 뛰었다. BAE시스템스의 자산가치는 약 30억 파운드[약 4조 8500억 원] 늘었다.

방산 기업 엘빗시스템스도 주가가 급등했다. 이스라엘 최대의 민간 방산 기업인 엘빗시스템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만에 주가가 18퍼센트 뛰었다.

서방 정부들은 사이버 전쟁 지출도 늘리고 있다. 투자회사 클리어브릿지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힐러리 프리시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위협을 알리는 선언이나 해킹, 랜섬웨어 공격은 언제나 기업 등의 조직들에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는 광고나 다름없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4호
번역 최병현

도널드 트럼프는 무기 지원을 늘리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력 강화를 부추겼다. “2018~2019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했다. 미국은 저격 소총,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와 퇴역한 미 해안경비대 초계함 두 척을 우크라이나 해군에 제공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군사 지원은 늘었다. “2021년 3월 1일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

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방어용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계획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2021년 6월 발표됐고, 뒤이어 2021년 9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한 살상·비살상 장비를 지원하는 6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이 발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김영익

이 글은 3월 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고 보충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1945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놓고 좌파 측에서 혼란이 적잖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우선 자본주의와 전쟁의 관계를 짚어 보고, 과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요한 전쟁들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 교훈을 적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살펴보려 한다.



제1차세계대전을 끝낸 1917년 러시아 혁명

자본주의와 전쟁

자본주의는 이전 사회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으로 점철된 사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끔찍한 전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100여 년 전 독일 사회당 지도자 카우츠키는 전쟁과 자본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부인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전쟁이 필연이 아니고 지속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이런 주장은 지금도 흔하다.)

레닌과 부하린 등 동시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이 경쟁은 결코 평화적인 과정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 경쟁하게 된 자본가들이 경제적 방식뿐 아니라 자국의 국가기구와 무력에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의 동력인 자본 간 경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인 것이다.

이윤을 위한 자본가들의 맹목적인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세계를 누가 지배할지를 두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레닌을 비롯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이런 경쟁 체제를 제국주의라고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국들은 경쟁을 제어하려고 서로 협정을 맺기도 했지만, 그들 사이에 새롭게 갈등이 불거지고 다시 전쟁이 나는 것을 협정들이 막지는 못했다.

제국주의와 전쟁이 자본주의의 동력인 경쟁적 자본축적에서 비롯한다는 점에는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전쟁을 없애려면 자본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근본적 대안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에게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과, 제국주의에 억압당하는 피억압 민족들의 투쟁에 있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과 혁명적 패배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좌파들의 주장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시험대를 거쳐야 했다.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강대국 간 식민지 쟁탈전은 끝내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을 불렀다.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한 편이 돼, 독일·오스트리아 등과 맞붙었다.

전쟁이 벌어지자, 그전까지 전쟁 반대를 수없이 다짐했던 독일 사회민주당 등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자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모두 적국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비난하며 그에 맞서 '우리' 나라를 '방어'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국 지배계급의 전쟁 노력에 반대한다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저버렸다. 결국 수많은 애민 청년들이 참호 속에서 학살되는 것을 도운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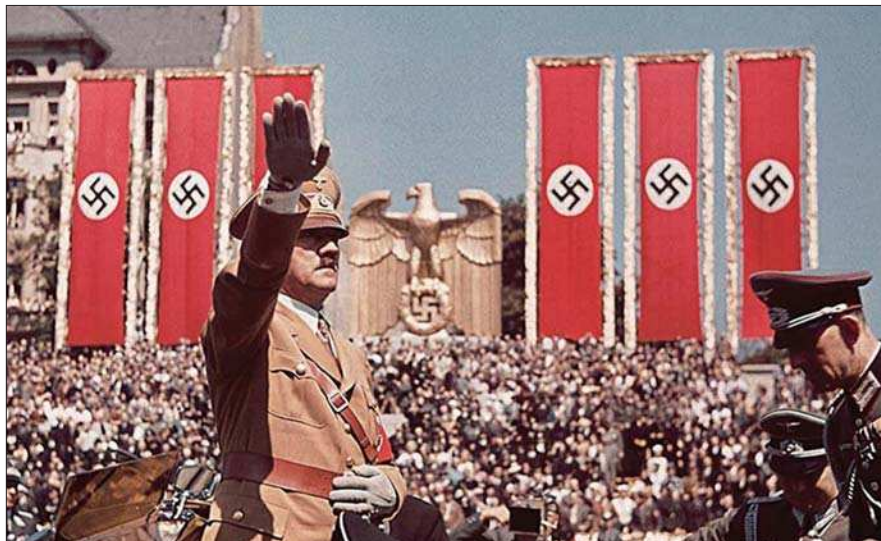
그때, 비록 소수였지만 자국 지배계급의 전쟁 노력에 반대한 혁명적 좌파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그런 좌파의 중심 인물이었다.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말했다.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범죄에도 반대하되, 독일 노동계급은 무엇보다 자국 지배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체제와 약소국 억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선의 반대편에서는 러시아 혁명가 레닌과 그가 이끈 볼셰비키당이 자국 지배자들의 전쟁 노력에 반대했다. 레닌은 제1차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임을 분명히 했고, 거기서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 방위 전쟁" 운운하는 것은 "순전한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레닌은 노동계급이 계급투쟁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 지배자들에 맞선 혁명과 내전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패배주의"로 알려진 입장이다.

레닌의 "혁명적 패배주의"는 양대 제국주의 진영 중 어느 한 쪽이 승리하는 게 더 낫다는 차악론이 아니었고, 중립론도 아니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전제정에 대항하고, 독일 노동자들은 카이저(독일 황제)에 대항하자는 것이었다.

역사는 레닌의 노선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계급 분단과 계급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마침내 전쟁은 유럽에서 혁명을 촉발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이듬해 독일에서도 혁명으로 정부가 전복됐다. 혁명이 제국주의 전쟁을 끝낸 것이다.



나치는 정말 끔찍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처칠이 전쟁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

제2차세계대전: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

1939년에 일어난 제2차세계대전은 흔히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으로 일컬어진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맞서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전쟁이라는 것이다. 당시 처칠과 루스벨트 등 연합국 정치인들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반파시즘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봤다. 1934년에 그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은 “세계의 재분할을 둘러싼 두 제국주의 간 투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에 “각국의 사회체제나 국가의 정치적 형태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전쟁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데서 완전히 부차적이라고 지적했다. 1939년 트로츠키는 이렇게 주장했다. “제국주의자들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에서는 같다. 식민지가 부족한 독일 제국주의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튀어나온 무서운 파시즘의 가면을 쓰고 있다.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해 뱃속이 든든한 영국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면 뒤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숨기고 있다.”

히틀러·무솔리니의 파시즘은 끔찍한 야만이었지만, 연합국들이 전쟁에 뛰어든 실제 동기는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었다. 영국은 독일의 유럽 지배가 영국 제국주의에 위협이 되자 비로소 전쟁을 결심했다. 미국은 일본을 제압해 태평양을 지배하고 최강 패권국 지위를 차지하고자 전쟁에 뛰어들었다.

독일의 침공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에 뛰어든 소련은 자국에서 독일군을 밀어내고 더 나아가 동유럽을 소련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좌파들은 이 전쟁을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으로 보는 유력한 여론을 받아들였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대표 클레멘트 애틀리가 처칠 내각의 부총리가 됐고, 노동당 소속의 다른 장관들도 노동자들이 전쟁에 협력하도록 설득하고, 심지어 파업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공산당들도 모두 연합국의 전쟁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

전쟁과 파시즘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곳곳에서 저항을 낳았다. 독일군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럽 곳곳에서 반란이 분출했고, 식민지들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1945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거대한 변화가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많은 좌파들, 특히 공산당들은 자신들이 ‘민주적’ 또는 ‘평화애호적’ 제국주의로 규정한 영국·미국에 협력하고 기존 지배 질서의 복원을 도왔다.(1945년 9월 8일 이후 남한을 점령한 미 군정을 조선 공산당도 이렇게 규정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전쟁은 절망만을 낳는 게 아니다. 위기 속에 혁명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혁명적 지도부가 부재한 탓에 이것은 가능성에 그치고 말았다.

냉전과 한국전쟁: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부차적인 물음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냉전이 시작됐다. 냉전은 흔히 ‘자본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로 그려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냉전도 두 초강대국(미국과 소련) 중심의 제국주의 경쟁 체제였다.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양대 진영의 적대와 갈등은 제3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키웠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국지적 열전을 낳았다.

세계를 둘로 쪼개 놓은 냉전의 압력 하에서 당시 좌파들은 양 진영 중 하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끌렸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이가엘 글록스타인(토니 클리프)은 이런 선택을 거부했다.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을 벌이는 제국주의 초강대국들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미국)도 모스크바(소련)도 아닌 국제사회주의”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이 구호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키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냉전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클리프가 이런 구호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진정한 사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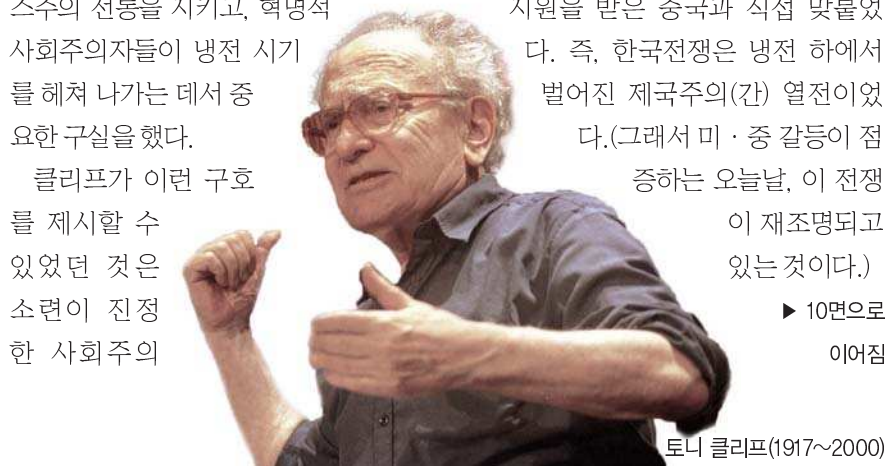
와는 아무 관계 없는 관료적(전면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임을 이해했기에 가능했다. 또, 클리프는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말에 점령한 동유럽의 국가들과 민족들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봤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냉전이 사실은 제국주의(간) 갈등임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해서 한국전쟁이 시작됐음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의 침공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을 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완전히 부차적인 물음이다. 거기서 출발해서는 전쟁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방침을 취할 수 없다.

한반도는 당시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전쟁 대부분 기간 미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과 직접 맞붙었다. 즉, 한국전쟁은 냉전 하에서 벌어진 제국주의(간) 열전이였다.(그래서 미·중 갈등이 점증하는 오늘날, 이 전쟁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토니 클리프(1917~2000)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무대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맞붙은 열전이였다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에 대기 중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사진: 연합뉴스

▶ 9면에서 이어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과거 중요한 전쟁들에서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펴봤다. 그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서방 세계의 많은 좌파들은 러시아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다거나, 권위주의적 국가라면서 말이다. 마치 서방은 제국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식이다.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나토의 확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국 제국주의의 믿음직한 대변자임을 보이려 한다.

영국 노동당 좌파계 의원들은 러시아와 나토를 모두 비판하는 영국 전쟁 저지연합의 성명에 서명했다가, 키어 스타머의 협박에 굴복해 서명을 철회했다.

미국에서는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민주사회당(DSA) 지도자이자 민주당 좌파계 하원의원들이 러시아만을 반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런 일들은 제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좌파가 취했던 입장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좌파들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전을 지지한다. 그는 비록 나토의 확장도 문제였다고 지적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인 정부의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움직임을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2월 2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NGO 시민단체들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시아가 먼저 총을 쏘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러시아 규탄에 주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무자비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도 제재와 무기 지원 등을 통해 이 갈등의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후 미국은 동유럽 국가와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을 나토로 끌어 들여 왔다. 미국이 동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점증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러시아의 푸틴은 나토의 확장에 대응하고 러시아가 세계적 수준의 지정학적 경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주목할 만한 선택을 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러시아에 '핵폭탄급' 금융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핵무기 대비 태세 강화로 응수하고 있다. 푸틴은 서방의 제재가 선전포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서방의 제재가 더 위험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오늘날 세계가 미국과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러시아가 중심인 권위주의 국가들로 나뉘어 있다며 서방을 (차악으로)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푸틴은 러시아를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의 우방 중에는 푸틴 못지않은 독재자들이 많다. 미국이 지원하는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치인들도 배타적 애국주의를 강화하며 친러시아계 주민과 다른 소수민족의 권리를 유린해 왔다. 서방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는 본질을 흐리는 기만이자 위선이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

소 한지원 연구실장은 "미국과 유럽이 세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 가능한 유일한 질서"이며 러시아 주도의 질서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세운 '질서'를 우리가 차악으로 옹호해야 할까? 전 세계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에게 갖은 희생을 강요한 그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작동 가능한 유일한 질서"라고 옹호해야 할까?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노동자 정당이 보잘것없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지킨다며 '우리' 나라의 제국주의를 지지하다가 독립적 정치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국수주의적 혼란에 빠뜨려 인류를 재앙에서 구원할 유일한 요소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국제 노동계급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을 건설할 자격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체제와 자국 지배계급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한편, 일부 좌파는 러시아를 서방에 맞선 진보적 대안으로 여기며 지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자민통계 언론인 <민플러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한 푸틴의 2월 24일 연설 전문을 게재했다.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다가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평소 미국의 한반도 간섭에 반대하고 민족 자주를 중시해 온 <민플러스>가 푸틴을 옹호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푸틴은 레닌과 볼셰비키의 민족 자결권 옹호가 우크라이나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비난한 바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민플러스>는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문제인 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서방 옹호만큼이나 러시아 옹호 입장도 잘못된 입장이다. 적의 적을 무조건 친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 둘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처럼 분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을 놓고 서방과 쟁탈전을 벌이는 제국주의 국가이고, 세계적 수준에서도 점점 더 그러고 싶어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세계적 제국주의 갈등에 얽혀 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왔고, 이 전쟁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세계적 수준에서 제국주의(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해 러시아 철군을 요구해야 하지만,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가 사태를 일으킨 주범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서방의 제재와 개입에 더욱 반대해야 한다.

또, 한국에 사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군수 지원 등으로 협력하는 것에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언젠가는 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100여 년 전 외침을 거듭 강조할 때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씹니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깡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는 단지 화성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S 씨가 전화로 보호소 내의 실상을 알려 왔다. 이미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구금된 이주민들의 고통을 여지없이 배가하는 곳이 돼 있었다.

여수외국인보호소는 2007년 화재 참사로 구금돼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곳이다. 올해는 참사 15주기이기도 하다.

인권 침해의 온상

2017년에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S 씨는 최근에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 항소한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비자 연장을 하러 방문한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구금됐다. 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였음에도 외국인청은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얼마 후 여수보호소로 이송된 S 씨는 현재 3개월째 구금돼 있다.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 비판해 왔다.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보호소 측은 환자들에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일쑤다.

이미 눈에 지병이 있던 S 씨는 과거에 4차례나 수술한 병력이 있다. 눈에 통증을 호소하고 며칠째 코피까지 났으나, 여수보호소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호소에 온 후 잠도 못 잘 정도로 눈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니깐 돈을 내라고 해요. 그런데 보호소 내에서는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외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소 측의 막무가내식 코로나 대응

보호소 측은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

**보호소 내의 생활은
흡사 교도소와 같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죄수복과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해야 하며,
외부 세계와의 연락은
제한적이다**

를 요구하는 S 씨를 검사도 없이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접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황당한 점은, 보호소 측이 코로나 확진이 확인된 것도 아닌 S 씨를 다른 코로나 확진자 7명과 함께 외부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갔더니 치료나 검사도 없이 4일 동안 타이레놀만 줬어요.”

S 씨는 병원에서 보호소로 돌아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옮겨 왔나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괜찮았어요. 코로나를 옮겨 온 것은 저들[보호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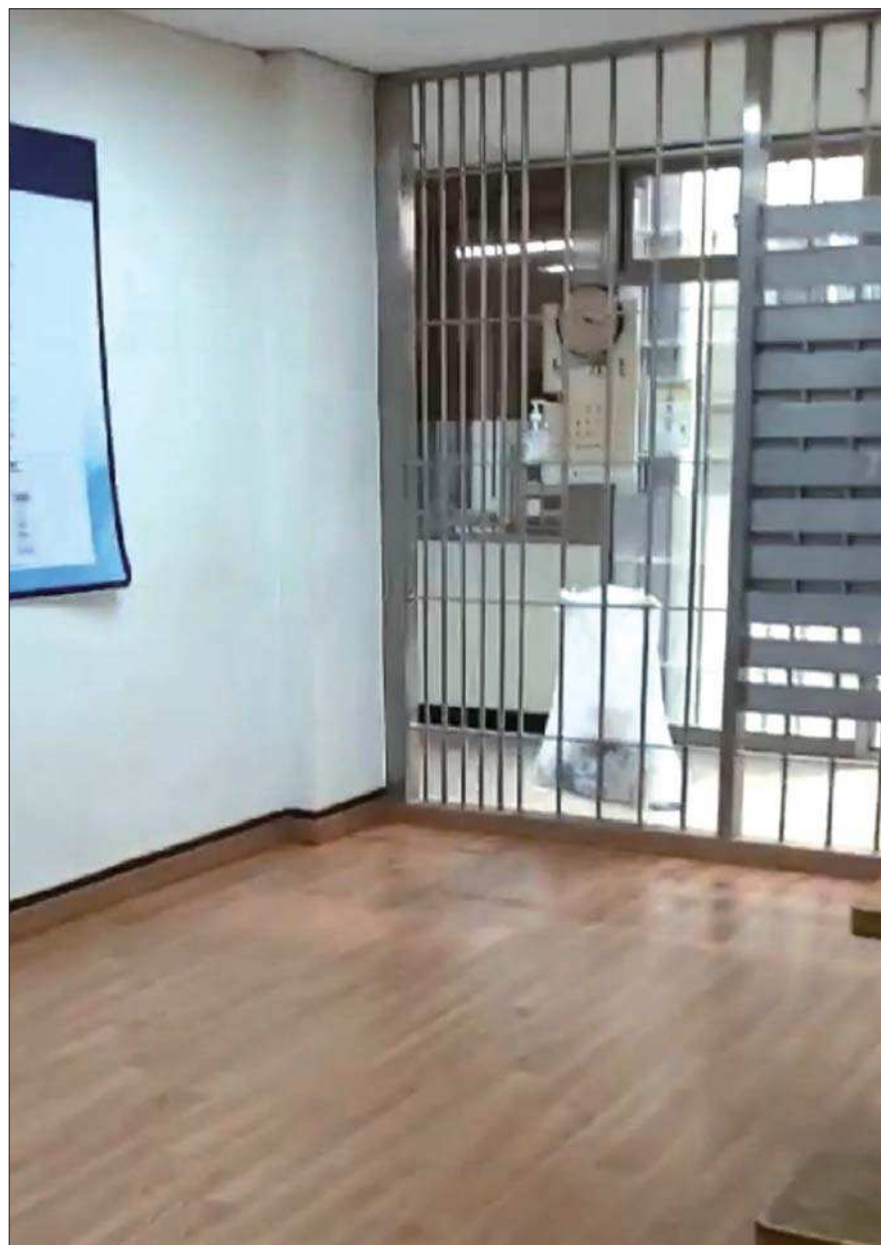
이주민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외국인보호소

보호소 내의 생활은 흡사 교도소와 같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죄수복과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해야 하며, 외부 세계와의 연락은 제한적이다. 개인 휴대폰은 소지가 금지돼 있고, 하루에 잘해야 10여 분 정도 보호소 측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연락은 만 원어치 전화카드를 구매해 공중전화로 이용해야만 한다.

S 씨는 보호소 내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한다.

“여기 안에서는 모든 물건이 밖보다 비싸요. 면도기도 없어서 십수 명이 하나를 돌려쓰고 있어요. 밥은 하루에 두 끼만 나오는데, 온 지 3달 만에 체중이 10킬로그램이나 빠졌어요.”

구금자들을 다루는 보호소 측의 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 '보호소'의 내부 모습

도도 마치 인간 이하의 존재를 대하는 식이다.

“제가 병원에 나흘 동안 갔다 왔을 때, 제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물었더니 여기 직원이 비웃으면서 답하기를 다 갖다 버리고 소각했다는 거예요.”

“무슬림인 제가 가지고 있던 쿠란도 불태워 버렸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처우에 항의하며 S 씨는 얼마 전 8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만류로 일단 단식을 중단했다는 그는, 보호소 당국이 자신이 밥을 먹든 말든 정말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직원은 저에게 제가 단식하다가 죽으면 관을 갖다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더러 여기서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는 S 씨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구금된 이주민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고, 확진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박이랑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3월 7일 위중증 환자는 955명, 하루 사망자는 139명(누적 사망자 9096명)에 이른다.

3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이 떠넘겨진 현실을 고발하며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는 발언으로 조수진 씨가 나섰다. 조수진 씨의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40일간 중환자실 입원을 거쳐 지금도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할머니가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갖은 애를 써야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격리 해제 기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런 속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사이 날아든 치료비 청구서를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더군요. 찾아 보니 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 공론화 모임을 거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 온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겨선 안 됩니다. 격리 해제 기준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둔 민지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저는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5일까지 제가 통보 받은 환자부담총액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환자부담 총액은 4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3월 7일 청와대 앞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수 있습니까? 이마저도 수급자가 아니라면 5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위중하신 어머니를 돌보며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착시 현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은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에 여유가 있다면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이는 기준 변화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지난 12월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여전히 중환자 여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고 2월부터는 격리 해제 기준이 검체 채취 7일 이후로 더 단축됐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 중환자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격리 해제된 환자들에게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떠넘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합병증 증세가 남아 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이 조기 격리 해제 조치는 원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도입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환자 병상 가동이 낮아진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해 환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로 코로나19에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에 대한 치료만이라도 충분히 해주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행동하는간호사회 운영위원이자 현직 간호사인 김민정 씨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완화하고 격리와 감염 관리는 개인에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의료진 감염이 늘어나니 이제 의료진 부족으로 7일이 아니라 5일만 격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병원에는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환자를 위한 돈은 없습니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2년 동안 외쳤음에도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많은 방송국과 언론사가 왔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오후 신속하게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 악화엔 국가 전액 보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엉뚱하게 암 환자를 예로 들며 “코로나19에 확진된 암환자가 격리 해제 이후에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암 치료 비용을

기간	2022.03.04까지	10일간(평일)	진료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영수증일
비급여1종-			
비급여2종-			
비급여3종-			
비급여4종-			
비급여5종-			
비급여6종-			
비급여7종-			
비급여8종-			
비급여9종-			
비급여10종-			
비급여11종-			
비급여12종-			
비급여13종-			
비급여14종-			
비급여15종-			
비급여16종-			
비급여17종-			
비급여18종-			
비급여19종-			
비급여20종-			
비급여21종-			
비급여22종-			
비급여23종-			
비급여24종-			
비급여25종-			
비급여26종-			
비급여27종-			
비급여28종-			
비급여29종-			
비급여30종-			
비급여31종-			
비급여32종-			
비급여33종-			
비급여34종-			
비급여35종-			
비급여36종-			
비급여37종-			
비급여38종-			
비급여39종-			
비급여40종-			
비급여41종-			
비급여42종-			
비급여43종-			
비급여44종-			
비급여45종-			
비급여46종-			
비급여47종-			
비급여48종-			
비급여49종-			
비급여50종-			
비급여51종-			
비급여52종-			
비급여53종-			
비급여54종-			
비급여55종-			
비급여56종-			
비급여57종-			
비급여58종-			
비급여59종-			
비급여60종-			
비급여61종-			
비급여62종-			
비급여63종-			
비급여64종-			
비급여65종-			
비급여66종-			
비급여67종-			
비급여68종-			
비급여69종-			
비급여70종-			
비급여71종-			
비급여72종-			
비급여73종-			
비급여74종-			
비급여75종-			
비급여76종-			
비급여77종-			
비급여78종-			
비급여79종-			
비급여80종-			
비급여81종-			
비급여82종-			
비급여83종-			
비급여84종-			
비급여85종-			
비급여86종-			
비급여87종-			
비급여88종-			
비급여89종-			
비급여90종-			
비급여91종-			
비급여92종-			
비급여93종-			
비급여94종-			
비급여95종-			
비급여96종-			
비급여97종-			
비급여98종-			
비급여99종-			
비급여100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날아든 병원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에서 암 치료비를 요구한 보호자는 없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례를 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은 없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고, 위중증과 사망 가능성도 커진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호흡기나 혈관에 후유증이 남으면 기저질환도 더 악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악화와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현학적으로 나누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 피해 환자들의 고통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목소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개별 가정에 떠넘긴 상황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여 준다. 이런 목소리아말로 ‘K-방역’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선영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성지현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전략표적 타격)으로 명칭 변경)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때문에 선정 당시부터 막대한 비용 등으로 논란이 컸음에도 정부는 도입을 강행했다.

북한은 남한의 F-35A 전투기 도입에 크게 반발해 왔다. 2019년에 F-35A가 한반도에 들어오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번 배치 완료가 끝이 아니다. 도입된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후속

군수지원(기술 지원, 수리 부속 정비 등)이 계속 필요하다.

올해 국방부 예산에 ‘킬체인’(북한 선제 타격 계획) 예산이 포함돼 있다. 성능 개량과 후속군수지원에만 2400억원이 책정됐고, 군 당국은 F-35A 추가 도입과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항공모함은 한국 지배계급이 세계에서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목록이다. 올해부터 개발 예산이 투입된다. 핵무기만 제외하고 웬만한 건 다 갖췄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비가 크게 증강돼 왔다.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매년 증액돼 2022년 55조

원으로 늘어났다.

얼마 전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선제 타격”, “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 등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도 윤석열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인의 3사관학교 졸업식 발언이 윤석열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 요지는 문재인 정부도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의 윤석열 비

판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이유다.

한국의 군비 증강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 격화의 일부다. 2010년대 이후 한국 외에도 중·일·인도 등의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군사예산을 늘리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긴장이 높아지면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 줬다.

또, 국방비 증액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대하지 않는 정의당, 회피하는 진보당

F-35A 배치 과정에서 좌파의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2019년에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당시 의원, 현 심상정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F-35 정비를 국산화하고 이참에 아예 청주공군기지를 항공 정비 산업의 메카로 삼자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듬해 청주에서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애초 F-35 도입을 반대하던 입장을 바꿨던 것이다.(관련 기사: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본지 299호)

물론, 김종대 전 의원과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파른 국방비 증액을 비판하기도 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선제적 군비 동결”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F-35A 도입 건에서 보듯이 정의당의 이런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다. 정의당은 평화를 지향하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일관된 애국주의 노선이 다.

정의당 지도부가 늘 사병의 복리 증진을 요구하고 방산비리 척결을 말하지만, 그것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방과 안보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F-35A에 반대한 평화운동가들 탄압 말라

이런 주장들을 통해 정의당은 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임을 주류 세력에게 입증받으려고 해 왔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 슬로건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튼튼한 안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남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을 비판하고 남한 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곤 했다. 이재명의 핵추진잠수함 계획에 정의당이 반대한 이유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독자적 우주로켓인 누리호가 시험 발사되자, 정의당은 바로 환영 논평을 냈다. 누리호 개발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하를 쌓는 과정이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배경으로 우파 정치인들이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은 우파를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나 찬찬히 들어 보면, 더 튼튼한 안보는 호전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진보당은 F-35A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낸 적이 없다. 청주에서는 2019년 몇몇 평당원들이 F-35A 배치 반대 캠페인을 벌이다가, 지난해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말이다.

아마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국가 탄압을 겪었기에, 예민한 안보 문제인(그것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F-35A 도입에 조심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국의 공격형 대량살상무기 확대에 침묵하는 것은 좌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F-35A 배치 완료는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일이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국 지배자들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워크프티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논쟁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공수처 통상조치 논란, N번방 방지법 ...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워크프티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1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도 취약계층은 홍수 등으로 죽을 확률이 15배 더 높는데, 기후변화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사진은 2011년 태국

사진 출처: Pandhapon22/shutterstock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최신 보고서 사회주의나 멸종이나 하는 선택 앞에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를 다루는 3개의 실무그룹이 있는데, 각 그룹은 5~7년에 한번씩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발간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어 2월 28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적응·취약성을 다룬 제2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기후 위기의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준다.

이번 IPCC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된 주요 보고서에 이어 나온 “영향·적응·취약성”에 관한 보고서이다.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이번 보고서는 환경 위기의 “범위와 규모”가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다. 생물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광범한 생태계의 악화”가 이미 일어났다.

기후 재앙을 막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영구적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역설한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기후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

다. IPCC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생물종 멸종률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온도가 3도까지 올라간다면 1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역대 IPCC 보고서들의 경고가 계속해서 강력해져 왔다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이번 보고서의 몇몇 결론은 충격을 준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안전한 식량과 물 공급은 후퇴하고 있다.” 그 탓에 사람과 동물 모두 새 질병이 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도 늘고 있다. 폭염은 특히 도시에서 더 흔하고 더 심각하며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핵심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

33억~36억 명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

다. IPCC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높은 신뢰도”를 갖고 주장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안 지역에 사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지구상에 기후변화로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그러나 IPCC는 지역별로 그 타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평등하다. “빈곤이 심하고, 정부의 한계가 크고, 기본 서비스와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 2010~2020년에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견줘 사망률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 인종, 저소득 또는 그 결합으로 인한” 부정의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가중시켰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것들(깨끗한 물 공급, 건강한 토양생태계, 식량 안전, 질병 위험, 기반시설 보존)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이주민과 난민이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충분히 신속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기술적 해결책을 잘못 사용해서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킨 경우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부적합한 지역에 숲을 조성하거나 바이오 에너지를 “기준 미달 수준으로 구현”해서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취해 온 조치들이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문제를 더 먼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과 기후 부정의에 도전하고 토착 공동체의 권한을 키우는 조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절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로 답해야 한다. IPCC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자본주의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 영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그로 인한 고통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떠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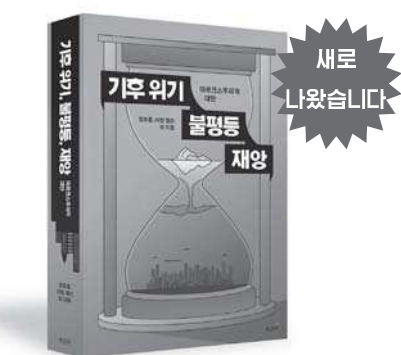
이번 IPCC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뒤에 발간됐다.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 이번에는 경쟁국들이 이해관계를 놓고 전쟁을 벌이도록 만들었으므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다.

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이 없이는 인류가 지구 온난화로 불타든지 아니면 핵전쟁의 화염 속에서 불타는 것이라는 점이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우리가 앞둔 선택은 사회주의나 멸종이나이다.

마틴 엠슨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4호 번역 강미령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중, 마틴 엠슨 외 지음, 책갈피, 624쪽, 24,000원



대형 산불 빈발은 기후 재난의 일부

짧은 시간에 벌어진 기상 현상을 두고 그것이 기후변화의 결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 현상에는 일정한 변동 폭이 있고 예외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 수증기 증발이 많아져 토양 등이 건조해지고 이는 불이 더 쉽게 번질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북미의 대형 산불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유엔환경 계획이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대형 산불이 최대 14퍼센트, 2050년에는 30퍼센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편, 나무와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크게 높인다. 북극의 동토와 적도 인근의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산불은 특히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세계적 규모에서 악순환이 생긴다.

악순환

이번 강원도 산불은 유난히 심했던 겨울 가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0~2021년 겨울 강수량은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는 장기간에 걸친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의 일부로 보는 게 맞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30년(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보다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이 22일 짧아졌다. 특히 봄철 기온은 지난 109년 동안 10년마다 0.26도씩 오르고 있다. 강수량은 늘어났지만 호우 일수는 줄어들었다.

산림청이 꼽은 역대 대형 산불 9건 중 8건이 2000년 이후에, 5건은 2010년 이후에 벌어진 것들이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한국에서도 자연 재해를 키우고 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세계 9위를 차지하면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 정부가 이번 강원도 산불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장호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모를 산불을 진압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이번 산불은 한때 한울(울진) 핵발전소 인근까지 번졌다. 산불의 영향으로 핵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외부 송전 선로 8개 중 2개가 차단됐다. 외부 전력 공급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 디젤 발전기도 가동됐다. 초대형 소

방 설비가 동원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핵발전소의 출력도 절반 가까이 낮춰야 했다.

산불은 강원도 삼척으로도 번져, 삼척의 천연가스 생산 기지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불탔다. 소방당국은 이 생산 기지를 지키려고 소방대원 225명과 장비 85대를 집중시켜야 했다. 그만큼 다른 곳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순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 지역에 핵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 등 위험 시설을 추가로 허가해 줬다.

반면, 산불 예방과 진화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림청과 소방청 등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2020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산불 관

련 예산은 고작 420억 원이었다. 소방청은 총예산이 2426억 원인데 산불 대응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산불 전문 진화차' 도입에 64억 원가량 책정된 게 사실상 전부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2021년 산불 예산은 예방과 진화 비용을 모두 합쳐 425억 원가량 된다.

기업주들에게 큰 이익을 줄 반도체 기술 개발에 올해에만 정부 예산 2896억 원이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 보라. 또 55조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과 비교해 보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2019년 대형 산불 때보다는 늘었지만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이 전부 파괴됐을 때 5200만 원, 반파됐을 때는 2600만 원이다. 세입자들에게는 600만 원의 입주 보증금 또는 임대료만 지급된다.

전쟁 무기를 구입하거나 환경 파괴 기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

3월 17일(목) 오후 8시

발제 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3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오늘날 여성의 처지는 양극단으로 묘사되고 합니다. 한편에선 여성 차별을 단지 옛일로 치부하고, 다른 한편에선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고, 여성 차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성의 처지는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변화가 여성 해방 운동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